주먹 불끈쥐고 가슴치며 "물러설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 대국민담화

민주당 "21세기판 유신독재" 반발

정부조직개편과 관련, 청와대와 여당, 야당의 대치가 이어지면서 국정 공백이 계속되자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담화'를 국면 돌파의 카드로 꺼냈다. 국민을 상대로 직접 호소하는 길을 택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박근혜 정부'의 상징격인 미래창조과학부의 기능을 둘러싼 논란 끝에 김종훈 장관 내정자가 전격 사퇴를 선언한 이날 오전 10시 청와대 춘추관 기자회견장 단상에 섰다.

짙은 초록색 재킷에 회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기자회견장에 들어선 박 대통령은 입장하자마자 오른손에 들고 있던 원고를 10분간 쉬지않고 읽어내려갔다. 평소와는 다른 강한 어조였고, 허태열 비서실장, 박흥렬 경호실장, 유민봉 국정기획수석, 이정현 정무수석 등 배석한 청와대 참모진들도 줄곧 굳은 표정을 짓고 있었다.

박 대통령은 특히 여러 차례 주먹을 불끈 쥐는 동작을 취하는 등 강한 제스처를 보이며 의지를 나타냈다.

박 대통령은 또 "저는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국가의 미래를 위해 이 문제만큼은 물러설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이라고 말할 때 주먹으로 가슴을 쳤고, "다시 한번 국회에 간곡하게 부탁드린다"고 발언할 때는 손바닥으로 가슴을 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방송진흥의 핵심 기능을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려는 자신의 구상을 양보할 수 없다는 점을 거듭 분명히 했다.

이를 위해 박 대통령은 새 정부가 방송을 장악하려 한다거나,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에 대한 인·허가권을 그대로 방송통신위원회에 둬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정부조직개편에 반대하는 야당의 주장을 바로잡고 개편안의 의도를 직접 설명함으로써 여론의 지지를 얻겠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박 대통령은 담화문에서 야당이 주장하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인·허가권의 방송통신위원회 존치에 대해 "지금은 국민이 출퇴근하면서 거리에서 휴대폰으로 방송을 보는 세상"이라며 "방송과 통신이 융합된 현실에서 방송정책과 통신정책을 분리시키는 것은 시대 흐름에도 역행하는 것이고 방통융합을 기반으로 한 ICT 산업을 우리의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도 어렵다"고 반박했다.

박 대통령은 또 야당의 방송 장악 주장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론을 제기했다. 박 대통령은 "방송의 공정성, 공익성의 핵심인 지상파 종편 보도채널 주제를 모두 방통위에 그대로 남겨두기로 했고 뉴미디어 방송사업자가 보도방송을 하는 것은 지금도 법적으로 금지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것만으로도 부족하다는 의견을 받아들여서 뉴미디어 방송사업자가 직접 보도방송을 하는 것을 보다 더 엄격히 금지하는 방안도 제시했다"며 "과거 생각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본질에서 벗어난 정치적 논쟁으로 이 문제를 묶어 놓으면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 같은 박 대통령의 강한 압박은 민주통합당의 반발을 불렀다.

특히 민주당은 박 대통령을 상대로 "21세기판 유신독재", "염치없다" 등의 표현을 동원하며 십자포화를 퍼부었다.

박기춘 원내대표는 "정치는 없고 통치만 존재한다"면서 "대통령이 브레이크를 걸어 협상의 발목을 잡더니 합의를 눈앞에 두고 청와대의 가이드라인으로 여당을 통제하고 의회를 제압하려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김종훈 전격 사퇴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내정자가 4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마친 후 기자들의 질문을 사양한 채 정론관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새정부 장기 파행 불가피

정부조직개편안 싸고 극한대결 … 국정운영 비상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내정자의 4일 자진사퇴로 박근혜 정부의 초기 국정 운영은 더욱 어려워지게 됐다.

정부조직 개편안의 처리를 놓고 여야가 극한 대결을 벌이면서 새 정부 내각 구성이 지연되고 국정이 사실상 올스톱된 마당에 더한 악재가 터져 전례없는 새 정부 장기 파행사태가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또 향후 정국은 청와대와 여야의 책임론 공방 속에 소용돌이로 빠져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이날 사퇴한 김 내정자는 박근혜 정부의 상징인 미래창조과학부의 수장이어서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내정자가 사퇴 의사를 철회하지 않는 이상 박 대통령은 미래창조과학부 수장을 맡을 인사를 다시 물색해야 하는데, 미래창조과학부에 대한 박 대통령의 인식이 너무나 엄중한 만큼 그 기간이 적지 않게 걸릴 가능성이 크다.

이 때문에 야당의 양보로 정부조직법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신임 내정자 인선과 이후 인사청문회 등의 작업을 거쳐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새 정부의 온전한 출범은 이달 중순을 훌쩍 넘길 수도 있다.

때문에 청와대는 물론 여야 정치권을 향한 여론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당장 정치 실종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이철희 두문정치전략연구소장은 "박 대통령의 담화와 김종훈 내정자의 사퇴로 문제가 더욱 꼬이는 것 같다"면서 "야당의 양보가 필요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박 대통령과 여당이 야당의 퇴로를 열어줘야 하는 데 압박만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여야는 2월 임시국회 종료를 하루 앞둔 이날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한 막판 협상에 나섰으나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정부조직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경제부총리, 미래창조과학부, 해양수산부 등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신설 및 재편되는 부처의 장관은 새 직제대로 임명될 수 없다.

여야는 전날 심야 협상에서 주요 9개 쟁점 가운데 위성방송과 IPTV(인터넷TV)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으나 최대 걸림돌인 SO(종합유선방송국) 업무이관 문제에 대해서는 평행선을 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막판 협상안 타결과 관련, 양당 모두 "협상은 상대방에 달렸다. 타결 가능성은 반반"이라고 전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정부개편 혼란…정치현실에 좌절"

CIA 활동 전력 등 의혹에 부담도

김종훈 사퇴 속내는

박근혜 정부의 신설 핵심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에 발탁된 김종훈 내정자가 4일 사퇴를 전격 선언한 배경이 이목을 끌고 있다.

15세의 나이로 미국 이민 길에 오른 후 온갖 역경을 딛고 '아메리칸 드림'을 이룬 그가 "마지막으로 조국에 봉사하겠다"며 의욕을 보인 지 보름여 만에 내정자직에서 물러난 데 대해 해석이 분분한 것이다.

김 내정자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장관직 사퇴 기자회견을 갖고 사퇴 이유로 정치권을 지목했다.

그는 "국가의 운명이 걸린 중대한 시점에 국회가 움직이지 않고 정부조직 개편안을 둘러싼 여러 혼란상을 보면서 조국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려던 저의 꿈도 산산조각이 났다"고 사퇴 배경을 설명했다.

박근혜 대통령도 이날 대국민 담화에서 "김종훈 내정자가 정치 현실에 좌절했다"고 강조했다.

정부조직개편안을 둘러싼 야당의 거센 반발로 개편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는 지적이다. 정부 조직법 개편안 처리 과정을 지켜보면서 '미국식 사고'를 가진 장관으로서 한국적 정치 현실을 넘어서기 쉽지 않겠다는 판단을 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사퇴 배경에 정치적 이유만 깔려 있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미래부 장관 내정 이후 그를 놓고 제기된 각종 의혹이 적잖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 등 야당은 김 내정자의 미국 중앙정보국(CIA) 활동 전력, '한국 비하발언', 국내 부동산 투기 의혹 등을 들어 철저한 검증 방침을 천명해 왔었다.

여기에다 미국 시민권 포기에 따른 국적포기세 부과에다 미국에 있는 막대한 재산 정리 등도 부담이 됐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김 내정자가 2007~2011년까지 CIA 외부자문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한 경력 때문에 안보 관련 정보의 유출 등을 우려한 미국이 시민권 포기를 불허할 수 있다는 법 해석을 주목하는 시각도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사퇴의 이유가 대통령의 명령조를 거부하는 야당과 정치권의 난맥상이라니 상당히 구차하다"고 지적했고, 박용진 대변인도 "김 내정자의 기자회견은 지켜보는 국민을 허탈하게 만드는 '정치적 할리우드 액션'의 백미"라고 비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통치의 시대는 갔고 정치만 가능한 시대"

조해진 새누리 의원

새누리당 조해진 의원은 4일 정부조직법 개정안 협상 난항과 관련, "상대방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대화와 타협으로 (야당의) 동의를 이끌어내고 절충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라며 청와대 측의 태도를 비판했다.

조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비공개 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편안 처리라는 과제를 둘러싸고 정치적인 절차를 밟는 과정을 좀 더 잘했다면 상황이 이렇게 어렵게까지 오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그는 "정부조직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여당과 야당의 의견 수렴이 안된 것 같고, 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사전에 야당 지도부에 내용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는 게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날 청와대 회동도 야당과 협의과정에서 공개해 정치상황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됐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에 대해선 "결의에 찬 담화 내용이 국민 여론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지만 매사를 이렇게 풀어갈 수는 없다"며 "지금은 통치의 시대는 갔고 정치만 가능한 시대"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